

항전 승리 80주년 주제전시회 7월 7일 개막!

7월 3일, 국무원 보도판공실 기자회견에서 확인한 데 따르면 7월 7일부터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에서 ‘민족해방과 세계평화를 위해—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주제전시회’가 개최된다.

‘력사를 기억하고 선열을 추모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개척하자’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총 8개 부분으로 구성, 전시면적은 1만 2,200평방미터에 달한다. 전시회에는 사진 1,525장과 문화재 3,237점이 전시되며 장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9월 3일 북경서 문예공연

기자회견에서 중공중앙 선전부, 문화관광부, 중앙방송총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업무부 및 북경시는 9월 3일 저녁 북경에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문예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공중앙 선전부와 문화관광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우수한 무대예술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문화관광부와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는 8월부터 9월까지 중국미술관에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미술작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인민넷—조문판

조선, 미국의 정치적 도발 규탄

7월 3일, 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 미국은 ‘쿼드안전대화’ 외무상회의를 계기로 조선의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를 부정하고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또 다시 자행하였다. 배타적인 소수 집단들에 의거하여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며 국제관계에 불안정을 조성하는 패권적 행태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주되는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 외무성은 조선의 존엄과 권익을 란폭하게 침해하면서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결코 없이로출시킨 미국의 악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하며 그것이 조래할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힘이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현존 상황을 일방적으로 변경시키려고 시도하는 불안정 세력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지역의 안전 근간을 위협하는 미국의 다자간 군사동맹 강화 책동과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도발적 군사행동들에 대해 자위적 성격의 적절하고도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조선의 고유한 주권 영역에 속한다.

조선은 조선의 국가적 지위와 조선반도지역의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변경시키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기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더욱 로골화되고 있는 현실에 민감하여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책임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것이다.

/ 중앙방송총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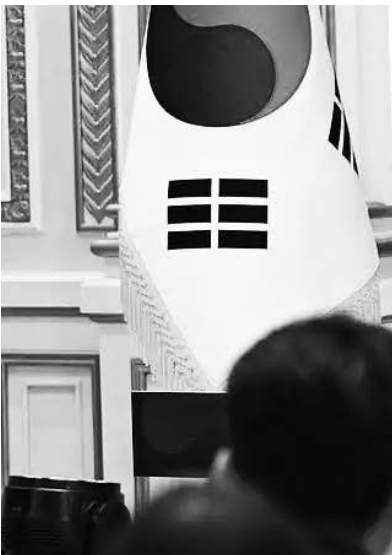
한국 대통령 이재명 : 한중 · 한로 관계 조속히 개선하고 한조 대화 재개할 것

7월 3일,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방향 등에 관한 질의에 답했다.

이재명은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이후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팀’을 구성해 민생경제 구축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는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추경(追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하면서 경제 회복과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해 국회의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은 굳건한 한미 동맹, 긴밀한 한미일 협력, 한중 및 한로 관계의 조속한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 평화와 국민 생활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또한 국방 강화와 함께 중단된 한조 교류를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평화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조 사이에 적대감과 불신이 심각해 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먼저 한조 접경지역의 대조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조선측이 기대



이상으로 빨리 호응해나섰다면 대조선 정책을 하나씩 완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은 논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과 계속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랑측이 가능한 안전 범위내에서 상호 리익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대

화와 소통, 협력과 공존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6월 3일, 이재명은 한국 대선에서 49.42%의 득표율로 제21대 한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6월 4일,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 국제방송

이재명, 김민석을 국무총리로 임명

7월 3일,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김민석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앞서 이날 한국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179명의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재명은 6월 4일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며 전 최고위원을 지낸 김민석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는 김민석을 지명한 이유에 대해 “풍부한 정치 경험과 민생정책 결정 능력, 국제적 시야와 정치인들을 통합하는 역량”을 갖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민석은 국회의원에 네차례 당선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다.

/ 중앙방송총국



7월 3일, 김민석이 국회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 신화넷

이재명 : 미국과의 협상 ‘매우 어렵다’

7월 3일,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미국과의 관계 협상이 “매우 어렵다.”며 7월 8일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표시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여러 나라와의 협상 마감일인 7월 9일이 다가오고 있다.

3일 오전, 이재명은 취임 한달을 맞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

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이 매우 어려우며 협상에서 한국의 국익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은 7월 8일까지 미국과 합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에서 한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상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화넷

도카라렬도, 12일 동안 지진 900회 이상



2024년 8월 29일, 행인들이 강풍 속에서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거리를 걷고 있다. / 신화넷

정부, 재난 방지 호소

일본 서남부 가고시마현 도카라렬도와 그 인근 해역에서 6월 21일 이후 지진 활동이 빈번히 발생, 2일 오후까지 900회 이상의 소규모 지진이 감지되고 최고 진도는 5.5급에 달했다. 일본 기상청은 7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지 민중들에게 재난 방지 준비를 계속할 것을 호소했다.

가고시마현 남부에 위치한 도카라렬도는 12개 섬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7개 섬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21일부터 7월 2일 16시까지 현지에서 911차례의 지진이 감지됐다. 이 가운데 2일 15시 26분에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5.5급에

달했다. 현지에는 아직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

앞서 도카라렬도는 2021년 12월과 2023년 9월에 지진 활동이 빈번한 상황이 각각 308회, 346회 관측된 바 있다.

일본 기상청은 과거 지진 때마다 패턴(模式)이 달랐기 때문에 도카라렬도의 이번 지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 여전히 강진에 대비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최근 일본 소셜미디어에는 ‘도카라렬도에서 지진이 빈발하면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여러 일본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반박했고 기상청도 부인했다. / 신화넷

캐나다, 미국의 압박에 디지털 서비스세 철회

6월 29일, 캐나다 재무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6월 30일 발효 예정이었던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줄곧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계획에 반대해왔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시도해왔다. 이에 캐나다 재무부장 프랑수

아 필리프 샹파뉴는 한때 계획의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캐나다정부는 캐나다 사용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캐나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판매하는 과학기술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할 계획이었다.

/ 신화넷

